

18일 Market Index			
↑ 코스피	7516.04	↑ 코스닥	1111.09
	(+22.86)		(-18.73)
↓ 금리 (연고채 3년)	3.757	↓ 환율 (원/달러)	1496.35
	(-0.009)		(-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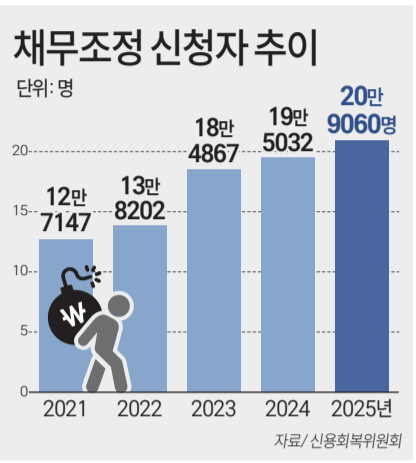
metro® 경제



햇살론, 채무조정 신청자 추이... '연체자 양산' 우려

5년새 채무조정 신청 60% 급증
햇살론 등 일부 서민정책상품
최소 6개월 연체시 위변제 진행

#.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최근 건디다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았다. 햇살론과 카드값, 신용대출 등이 얽히며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씨는 연체가 장기화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신복위는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연체가 발생해야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결국 김씨는 햇살론을 제외한 일부 채무만 조정받았다. 김씨는 "취약계층 대부분이 햇살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부담되는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채무조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 햇살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위한 채무조정은 일정기간 연체가 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자는 20만9060명에 달한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12만7147명)과 비교하면 60%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후에도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시기부터 누적된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지 못한 채무자들이 결국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 햇살론 '최대 1년' 연체돼야 채무조정 문제는 채무조정 수요가 늘고있음에도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일정 기간이 지나야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일반채권은 짧게는

장기연체가 3개월 이상 지속되면 상각채권으로 분류하지만 햇살론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실제 사례를 보면 최소 6개월 이상, 보통 1년까지 연체가 돼야 대위변제가 진행돼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연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채무조정이나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에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이전 또는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를, 사전채무조정은 31~89일 연체자가 대상이다. 햇살론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은 실제 채무조정까지 수개월 이상의 연체가 필요한 사례가 있는 만큼 제도 간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 <4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l15@metroseoul.co.kr

주식 등 30% 할인 유동성 리스크 관리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규정' 마련
규정변경 예고 거쳐 내년부터 시행

금융당국이 '레고랜드 사태' 때 드러난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동성 규제 개정에 나선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최대 30% 할인을 적용하고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부채에 반영해, 위기시 실제 현금화 능력을 따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18일 증권사 유동성 관리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각 증권사의 전산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산정 기준을 세분화해 '신조정유동성비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유동자산의 가격 변동 위험도에 따라 가치를 깎아서 계산하는 할인율(헤어컷)을 반영한다. 주식과 일반 ETF는 가격 급락 가능성을 고려해 15%, 합성ETF는 거래 상대방 위험을 감안해 30%의 할인율(헤어컷)을 적용한다. AA등급 채권은 7%, A등급 이하 채권은 10%를 차감해 평가한다. 반면 국채와 특수채, AAA등급 채권, 실물형 국공채 ETF 등은 사실상 현금에 가까운 자산으로 보고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유동부채에는 채무보증 등 우발채무도 명시하도록 했다. 우발채무를 차환 발행 증권 또는 현금유출 가능한 대출·출자·약정 등으로 구분하고 종류에 따라 산정된 잔액을 유동부채에 가산해 유동성 여력을 파악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 대상도 대폭 늘어난다.

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상품 발행사 등 23개사에만 적용되던 '유동성 규제 준수 의무'가 국내 49개 증권사로 확대된다. 증권사들은 1개월 및 3개월 유동성 비율을 각각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중소형 증권사부터 무너지는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에 실질 위험도 반영할 계획이다.

집합투자증권(펀드)에서 ETF 등 개방형 펀드는 환매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부동산 펀드 등 폐쇄형 펀드는 잔존 만기를 기준으로 유동화 기간을 산정한다. 또한 담보제공 자산은 예외 없이 유동자산에서 차감하고 유동부채 산정 시에는 유출률이 높을수록 부채가 증가하도록 차등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및 증권사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 시작

취약계층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8일부터 1인당 10만~25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진행된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 상점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가능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

法 가치분, 李 '경영권 존중' 언급... 노조 "파업은 강행"

삼전 노사 사후조정 오늘 결론
법원, 쟁의행위 금지 가치분 일부 인용
이재명 대통령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

법원이 18일 삼성전자 사측의 노동조합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경영권 존중'을 언급하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가치분 해석을 두고 노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진행된 노사간 사후조정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19일로 연장됐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신우정 수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4가지 항목 중 안전보호시설 유지, 웨이퍼 변질 방지 보안작업, 시설 점거 금지 등 3가지가 받아들여졌다. 조합원 파업 참가 호소 과정의 협박 금지는 기각됐다. <관련기사 3면>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인 반도체 설비는 한번 손상되면 재가동까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생산 차질이 전방 산업으로 이어질 경우 사후 금전 배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와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가치분 인용 직후 '평상시' 기준을 두고 노사간 해석 충돌이 빚어졌다.

노조 측은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마중 의견서를 통해 '평상시'가 인력이 적은 '주말·연휴' 수준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파업기간 중 투입해야 할 인력이 최소화한다는 논리다. 이에 사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평상시란 평상시의 평일 또는 평상시의 주말·휴일을 의미한다고 결정문에 명확히 적시했다"며 "노조측 주장은 법원 결정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평상시란 평일이든 주말이든 그동안 해온 방식 그대로 작업하라는 의미"라며 "노조의 주말·연휴 기준 해석은 틀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행보에 자제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에 이은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다시 시사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2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

메트로 한줄뉴스



- ▲정부,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착수 계획... "신속히 신원 확인"
- ▲강득구 "삼성 멈추면 대한민국 흔들려...민심 잃은 싸움은 이겨도 지는 싸움" /사진 뉴시스

- ▲부산시장 후보 토론회 격돌, 정책 사라지고 '의혹 난타전'
- ▲행안장관, GTX-A 철근 누락에 "국토부와 합동 안전점검"

- ▲장동혁 "'5·18 정신' 李·민주당 권력 확장 도구...입으로만 외쳐"
- ▲국힘, 정원오 고발 예정... "오세훈 흠집 내려 GTX 안전 왜곡"